



융복합형 안전산업 육성 본격 추진

新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 「안전산업육성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지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된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중 안전산업육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서, 기착수된 국가안전대진단과 진단 이후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안전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행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www.neac.go.kr

** 산업부, 인행부 공동주관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금융위, 고용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중기청 참여

금번 Kick-off 회의에서는 향후 지원단 운영계획과 더불어 민간(산업연구원)에서 제안한 추진필요과제 검토와 세부이행방안,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육성 연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안전산업육성관련 산학연 전문가

들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과제 세부이행방안, 신규과제 발굴, 민간 정책수요 반영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안전대진단과 연계된 안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안전규제 중심의 “안전산업”을 국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기술과 사업을 포괄하는 창조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있고 안전산업이 ICT 등 신기술, 금융·컨설팅·엔지니어링 등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산업육성지원단 구성·운영

■ 지원단 구성

- 단장(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인행부 안전관리본부장 공동)
- 관계부처 국장 참여
 - * 기재부, 행안부(방재청), 미래부, 금융위, 교육부, 국토부, 환경부 등 5대 분야 이행과제 주무부처청이 참여하고 세부 이행과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청(문화부, 중기청, 조달청 등)도 시안별로 지원단에 참여 및 협조
- 민간정책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자문단을 구성·운영
 - * 민간자문단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구성

■ 지원단 기능

- ① 세부추진과제 이행점검
- ② 종합계획수립·발표
- ③ 지원 제도 정비
- ④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육성 연계 강화(계획간 연계·조정, Feedback 등)
- ⑤ 부처간 협업·조정
- ⑥ 시장 및 산업 실태조사 공동수행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6)